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

2019년 10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시간		식순
13:00~13:30	30분	등록
13:30~13:50	20분	• 내빈소개 • 개회사 : 문진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축 사 : 최 광 前 보건복지부 장관
13:50~14:10	20분	좌장 :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 발제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고용과 노인복지 정책 •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14:10~15:00	50분	토론 •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15:00~15:20	20분	종합토론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등

목 차

개회사 문진국_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4
전삼현_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6
축 사 황교안_ 자유한국당 당대표	8
김학용_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10
최 광_ 前 보건복지부 장관	12
발 제 김원식_ 건국대학교 교수	15
토 론 송헌재_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41
윤석명_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5
최종석_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55

개회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문진국**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바쁜 일정 중에 자리를 빛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김태기 단국대학교 교수님, 주제 발표를 해주실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에 4차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공장자동화 등 ICT 기술과 기존산업이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업종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인구고령화’라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돼 앞으로 48년 뒤에는 10명 중 4명(46.5%)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됩니다. 반면에 출산율의 경우,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제일 꼴찌인 수준으로 20년만에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4차산업혁명과 인구고령화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마주하는 지금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노인도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분들의 활발한 의견개진과 토론을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확립하고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책 및 입법 활동으로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문진국**

개회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전삼현

바쁘신 가운데도 문진국 의원실이 주최하고 저희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일자리복지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두려움 내지는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보건대 산업혁명은 노동력을 감축하면서도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수용하고 이에 동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일자리를 AI, 로봇 등이 대체하는 만큼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현재의 산업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녁 있는 삶”, “고용안정성” 등을 이유로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 문재인 정부 식 노동정책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최저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주52시간근로시간제한 등과 같은 노동시장 경직화 정책은 결국, 청년과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정부실패를 재정을 확대하여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국가재정 확대형 일자리 창출은 국민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청년과 노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으며 노동의 질 또한 제고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노동시장유연화와 관련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만 활발한 논의들이 이뤄져

왔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수많은 노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는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는 경우 노인일자리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를 맡아주신 건국대학교의 김원식 교수님과 사회와 토론을 맡아주신 단국대학교의 김태기 교수님, 서울시립대의 송헌재 교수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박사님, 한국경제신문의 최종석 전문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최해주신 자유한국당의 문진국 의원님과 스태프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이 토론회를 위해 축사를 담당해주시는 최광 장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토론회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전삼현

축사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 일자리 복지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정성 들여 토론회를 마련하신 문진국 의원님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합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올해 14.9%에서 2045년 37.0%, 2067년 46.5%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생산연령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미래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대폭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노동시장의 체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기존의 일자리, 근무 환경, 작업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직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뒷받침될 때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한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축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기획하시고, 준비 해 주신 저희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으로 많은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은 불과 17년만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2%를 웃도는 이른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심지어 2025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이렇다 할 노인일자리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노동구조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현실적인 대안 모색보다는 정년연장, 복지확대와 같은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만을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노인 고용창출의 올바른 방향과 합리적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개최를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좌장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태기, 김원식 교수님과 지정토론에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님, 송헌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학용

축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최 광**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이번 정책토론회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원식 교수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란 제목으로 매우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발표문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제어만 살펴도 1. 제4차 산업혁명, 2. 고령화, 3. 노인, 4. (노인)근로자, 5. (노인)노동시장, 6. (노인)복지정책 등 많은 핵심어가 많습니다. 핵심 주제어 하나하나도 큰 주제이기에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발제자 김원식 교수가 주제에 충실한 내용을 잘 정리하였기에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발제자와 토론자에게 맡기고 정책토론의 행간을 두고 몇 말씀 하겠습니다. 제 자신 평생의 직업이 직업인지라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축사를 하기보다 본질적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이 호들갑에 가까울 정도로 일반인들을 놀라 키고 정책담당자들이 부산을 뜨는 현상은 제가 보기에 다소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고용이 얼마큼 주는지 등의 수치에서부터 인간의 사고와 행동 자체가 근원적으로 변화한다는 예측에 이르면 제4차 산업혁명은 정말 미증유의 혁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최대한의 대책이 아니고 최소한의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극적이기 보다는 소극적 대책이 좋지 않을까요? 민이 주도하도록 하고 정부는 관련 SOC를 구축하는 선에 머물러야. 앞서의 제1차 제2차 제3차 산업혁명에서 어느 나라나, 어느 개인이나, 어느 조직이 각 혁명을 예언 예상하고 준비를 해 선두를 달렸는가요? 미래 먹거리 산업은 시장이 선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특정분야를 지정하고 집중 육성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직속으로 제4차 산업혁명 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제발 만들지 말길 그리고 그 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지 않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이 국가 정책상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근원적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해 봅니다. 생의 주기에서 모든 사람이 어린이, 청년, 노인의 시기를 거칩니다. 모든 세대가 각기의 이유로 각 시기마다 특별대우를 요청합니다. 누가 누구를 특별히 취급해 주고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요? 보통 사람이 있어야 특별 사람의 존재가 가능한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동시에 평생 동안 특별 취급 받을 수 있는가?

세 번째로 노인노동시장에서 노인근로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노인근로자의 욕구와 청년근로자의 욕구는 과연 다른가? 노인근로자도 욕구와 선호가 천차만별인데 평균을 지향하는 획일적 국가정책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가? 세계(世界) 역사상(歷史上) 최대 업적의 35%는 60-70대에 의하여, 23%는 70-80세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成就)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노인들이 특별히 취급되고 국가의 지원해서 이 모든 성취들이 가능했는가요?

네 번째로 노인 복지정책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것입니다. 고령화 노령화 때문에 4대 보험을 포함 각종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진단이 아닌지요?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저출산 고령화나 낮은 수익률 때문에 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고 낮은 부담 높은 혜택으로 설계된 제도 자체 때문이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평균적으로 각자 불입액의 1.8배 연금액을 받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고 정치가 정책담당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우리 사회의 지적 수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끝으로 노인 문제 특히 노인고용 노인복지를 논하면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빠질 수 없습니다. 세대 간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수록 앞으로 세대 간 갈등은 정치적으로 더 큰 위세를 부릴 터인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와 분석의 틀 자체가 무엇인지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책 난맥상의 상당한 책임이 정치가 못지않게 전문가들에게 있다. 복지 전문가들과 노인문제 전문가들의 합작에 의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노인주도성장 정책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다. 걱정이 기우로 끝나길 바란다. 세상 자체가 복잡하고 따라서 해결해야 할 문제 자체가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문제의 본질은 팽개쳐 둔 채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현실의 (노인)복지정책이 노인 문제를 얼마나 어떻게 해결할는지?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前 보건복지부 장관 **최 광**

발 제

4차산업 혁명시대의 노인고용과 노인복지 정책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김 원식
건국대 교수

2019. 10. 31

문진국의원주최/ 바른사회시민회의주관



목차

- I. 서론
- II. 한국 고령층의 노동과 복지
- III. 4차산업혁명시대의 베이비붐 세대
- IV.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노동시장 정책 방향
- V.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 VI. 결론



I. 서론

4차산업혁명시대의 고령화 어떻게 볼 것인가?

-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
 - 신기술의 채용에 따른 고용의 감소
 - 신기술의 채용에 따른 노인들의 근로환경 개선
- 고령화
 - 고령자수의 증가
 - 빠른 속도의 평균수명 증가
 - 고령인구비율의 증가
 -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자부양인력의 절대적 감소
 - 성장을 저하(소득감소)와 고령자보호(비용증가) 간의 상충
- 노동시장에 대한 의미
 - 현재의 고령근로자는 '새로운 자원'
 - 고령근로자의 1년 고용연장은 GDP 1% 성장*
 - 생산증가, 세수증가 및 연금 부담 감소 등에 따름

한국은 고령화사회? (no), 고령사회(yes)

- 예측불가능한 평균수명의 상승 (2017년 82.7세)
 - 남성: 79.7세, 여성: 85.7세
 - 1970년 평균수명 58.8세
- 65세 기준 기대여명
 - 남성 18.4년, 여성 22.6년 (2016)
 - 남성 15.8년, 여성 19.8년 (2006)
- 건강수명: 64.9세(2016)
- 가장 오랜 직장 퇴직연령: 49.4세 (2019)
 - 법정정년: 55세(2015) → 60세 (2017)
- 핵가족화와 노인가구/1인가구 증가
 - 65세이상 자녀와 비동거율: 72.4%(2017), 68.6%(2011)
- 노인빈곤율: 46.5% (2016, 중위소득 50%미만), 29.3% (자산포함기준)
 - 노인 자산 중 부동산비중 70% 수준
 - 노후자산의 연금화 필요
- 취업연령 30세/ 퇴직연령 50세/ 평균수명 83세
 - 20년 저축해서 33년을 생계유지
- 적자인생
 - 정상적 노후소득 보장 불가능

노인근로자의 정의

- 한국
 - 장년: 55세 이상 일할 수 있는 노인
- 호주
 - 본인이 노인근로자라고 생각하는 나이: 45-55세
 - 일반인이 노인근로자라고 생각하는 나이: 40-65세*
 - Dep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nce Relations: 45세 이상
 - 연방정부 복지정책: 50세 이상
 - 통계청: 55세 이상
- 영국
 - 사용자가 생각하는 고령근로자의 평균나이: 56.7세
 - 근로자가 생각하는 고령근로자의 평균나이: 55.7세
- 정년연장으로 노인노동시장이 확대됨.
 -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더 확대될 것임.
- 노인근로자는 우리 경제의 마지막 자원(resource)

노인노동시장의 중요성

- 고령화로 인한 사회 지속가능성 없음.
 - 노인관련 정부재정 부담 가속화
 - 노인부양계층으로서 근로계층 감소
 -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잠재력 하락
- 노인건강 개선으로 인한 경제활동 가능
 - 고령자들의 사회의존도 개선 가능
 - 고용과 행복추구
- 노동시장 참여 연령 70세 상향조정 (긍정)시나리오
 - 노인복지지출 감소로 정부재정수지 개선
 - 노동시장 참여자 증가
 - 세수 및 보험료수입 증대
 - 피부양계층 감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시장 매칭 활성화
- 고령(노동)사회를 위한 전반적 사회시스템 개혁 필요성
 - 고령사회 투자 제고

현황: 노동시장의 현황

- 근로자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소득주도성장으로 근로자간 임금 격차 커지고 있음.
 - 근로자 계층화
- 가계순저축율 하락 중: 6.9%(2019), 8.4%(2015, 2000년 이후 최고), 24.3%(1988)
 - 스위스 (20.13%), 스웨덴(16.45%), 룩셈부르크(17.48%), 독일(10.38%) 등 (2015)
 - 고령화 및 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저축 증가
 - 가계부채: 1,099조원(2015.3), 가계 가처분소득대비 137.6%. 국민총생산의 80%수준.
 - 1,257조원(2016.6), 1500조원(2019.9)
- 2020년도 사회복지와 보건 부문은 181.6조원으로 정부예산의 35.3%. (146.4조 원, 2017). 그러나 빈곤률은 하락하지 않고 있음.
 - 181조원은 181만명이 연간 1억원을 나눌 수 있는 돈
 - 세모녀 사건, 탈북모녀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빈발
- 국민들의 복지 기대치 대비 만족도 낮음.
 - 노인요양, 보육, 교육, 주택 등 양적 질적 복지서비스 요구 확대
- 국민복지비 증가의 국가부채화
 - 복지비 부담 기피
 - 복지 vs 세금 논쟁으로 사회적 갈등 심화
 - 2020년 예산안 3.9조원 증가, 보건복지노동부문예산 20,6조원 증가

II. 한국 고령층의 노동과 복지

노인 현황(노동시장)

- 2019년 65세이상 고령자는 768.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9%, 2025년 20.3%, 2096년 46.7%.
 - 노인부양비(65세이상 인구/15-64세이상 인구): 20.4명(2019), 100.4명(2065)
 - 지역전 분포가 매우 다름: 전남 22.3%, 세종 8.9%
 - 전반적인 고령자의 기준 나이 조정 필요함.
 -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하여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 고령자 취업율: 31.3% (2018년), 30.6% (2017년).
 - 2008년 30.6%로 과거 10년간 거의 변화 없음.
 - 고령 취업자의 건강상태가 양호인 비율: 30.7% / 비취업 고령자는 19.4%
 - 고령 취업자의 노후준비 비율: 60.9% / 비취업 고령자는 42.5%
 - 고령 취업자의 독립가구 비율: 76.0% / 비취업 고령자는 70.8%
- 55-79세 산업별 취업자 비중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36.4%) > 도소매·음식숙박업(19.8%) > 농림어업(13.8%)
- 55-79세 직업별 취업자 비중
 - 단순노무종사자(24.3%) > 서비스·판매종사자(23.0%) > 기능·기계조작 종사자(22.0%)
-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기간은 15년5.7개월
 - 남자는 19년2.2개월, 여자는 11년 8.1개월
 -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정책으로 근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노인 현황(노동시장)

<표> 노후준비 방법 (65세 이상, 2017)

	취업 여부1)	합계	준비되어 있음	준비되어 있지 않음	아직생각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준비할 능력 없다	자녀에게 의지한다	기타
65세이상	취업자	100.0	60.9	39.1	2.6	4.2	25.4	6.8	0.1
	비취업자	100.0	42.5	57.5	1.3	1.9	32.2	21.9	0.2
65~74세	취업자	100.0	65.6	34.4	2.9	4.6	23.0	3.8	0.1
	비취업자	100.0	51.2	48.8	1.4	2.7	31.7	12.7	0.2
75세이상	취업자	100.0	46.1	53.9	1.6	3.0	32.7	16.5	-
	비취업자	100.0	32.5	67.5	1.1	0.9	32.8	32.4	0.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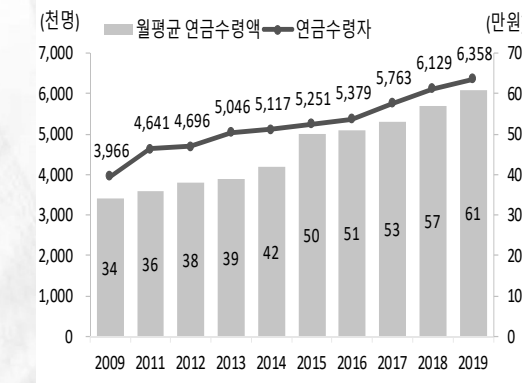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연령에 따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후준비 상태가 매우 다름.
- 개인의 생애 관점에서 cross-sectional 현상은 개인의 향후 노후성향으로 가정해야 할 것임.

노인 현황(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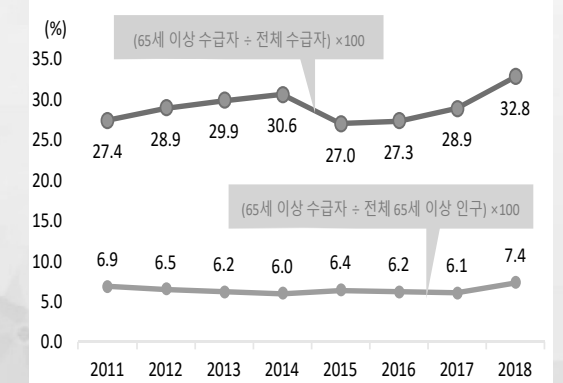
- 2019년 고령자(55-79세)의 연금수령비율: 45.9%
– 월평균 61만원(57만원, 2018)
- 2018년 65세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7.4% (6.1%, 2017)

<그림> 연금수령자 및 연금수령액(65세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그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65세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노인 현황(노동시장)

<표> 생활비 마련 방법 (65세 이상, 2017, %)

	취업여부1)	합계	본인과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
65세 이상	취업자	100.0	91.5	5.0	3.5
	비취업자	100.0	49.4	34.3	16.3
65~74세	취업자	100.0	95.1	3.0	1.9
	비취업자	100.0	61.6	24.6	13.9
75세 이상	취업자	100.0	80.1	11.3	8.5
	비취업자	100.0	35.3	45.5	19.2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7

주: 1) 지난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하였다',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비취업자들의 경우 정부 및 사회단체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음.

III. 4차산업혁명시대의 베이비붐 세대

4차산업혁명 (WEF)

- 1차: 증기기관을 활용한 기계화 (1784년)
- 2차: 전기 및 통신을 활용한 대량생산 (1870년)
- 3차: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와 자동화 생산시스템 (1969년)
- 4차: AI 등 최첨단 기술과 산업의 융합 (2010년 이후)
 - IoT: 세계 어디서나 원격 조정
 - AR/VR: 육감 극대화
 - Robot: 노동의 대체와 노동 도우미(노인에 긍정적)
 - Dron: 비용절감
 - 3D-printer: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만족도 극대화
 - Connected car: 누구에게나 기사없는 사회
 - Uber: 시간 맞춤형 이동
 - 기타
 -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 바이오, 오프라인 등의 기술을 융합하는 것", Claus Schwab
- 긍정:
 - 생산성의 비약적 증대
 - 소득과 삶의 질 개선
- 부정:
 - 새로운 노동환경의 도래와 전통적 노동시장의 붕괴: On-demand Workers by Ubernomics
 - 비정규직의 주류화
 - 로봇 실업: 미국의 경우 15년 내 노동시장의 38% 대체 가능 (Martin Ford, "Rise of Robots")
 - 로봇세/기술세: Bill Gates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15



베이비붐세대의 특성

- 고령사회화 함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고령층으로 폭이 두꺼워짐
 - 일할 수 있는 고령자 vs 일할 수 없는 고령자
 - 노인복지법으로 노인을 장년과 노인으로 구분
 - 장년: 50세부터 65세의 노인 및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
 -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
 - 노후설계지원법(2015.12) 등 범사회적으로 노후생활의 자립을 도모함.
- 사회적 변화와 고령자 특성별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 노후보장 대책이 필요함.
 - 평균수명의 80세 시대
 - 최빈도 사망연령 90세 시대
 - 고학력 건강 베이비붐 (1955년-1963년생) 세대
 - 건강수명의 증가: 고령층 Leisure Class 증가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17



<표> 4차산업혁명 국가별 적응력 순위

순위	국가	노동유연성	기술수준	교육적응력	인프라	법적안정성	종합
1	스위스	1	4	1	4.5	6.75	3.4
2	싱가포르	2	1	9	3.5	9	4.9
3	네덜란드	17	3	8	6.5	12.5	9.4
4	미국	4	6	4	12	23	10.2
5	일본	21	21	5	12	18	15.4
25	한국	83	23	19	20	62.25	41.5
28	중국	37	68	31	56.5	64.25	51.4
31	러시아	50	38	68	47.5	114	63.5
41	인도	102	90	42	100.5	81.5	83.4
43	브라질	122	93	84	64	97.75	92.2

출처: UBS, 각분야별 가중평균 랭킹 기준, 김정욱 외, 2016 다보스 리포트: 인공지능발 4차 산업혁명, 매일경제신문사, p.53.

-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의 적응력이 현격히 하락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노동시장유연성에서 적응력이 떨어짐.
 -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복지개혁으로만 해소될 수 있음.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16



베이비붐세대의 특성

- 베이비붐 세대는 1998년 외환위기 이전의 노인세대와 성격이 다름.
- 부정적 측면
 -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1998년 외환위기 때 자신의 퇴직금을 모두 소진한 집단임.
 - 이후에도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자산이 감소하고 이자율도 낮아서 재산 형성이 안됨.
 - 특히 확정급여형 민간연금이나 저축에 노후를 의존했던 근로자들이 수익률이 하락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될 급여수준이 감소함.
- 긍정적 측면
 - 고령 나이임에도 다른 세대들과 다르게 노동시장에서 동화하면서 근로하고 있음.
 - 과거 노후세대보다 훨씬 건강함.
 - 과거의 노후세대들 보다 학력이 높음.
 - 최신의 전자기기들의 이용 가능하여 쉽게 젊은이들의 역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
 - 사회적 네트워크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동연배들과 정보교환이나 교류를 유지함.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18



노인근로자의 특성

- 노인은 중요자산임: 지식, 통찰력, 경험이 있음.
 - 노인들은 직업자세, 기술, 열정, 건강, 가족에 대한 의무감, 개인재무 등 매우 다른 계층임.
 - 노인근로자들은 근무윤리, 신용, 충성심, 사업경영, 제도적 기억, 특성화된 기술을 보유함.
 - 일반인들의 인식
 - 청년보다 덜 생산적, 느리다, 기술적 변화에 적응력이 낮다, 관리자에게 저항적이다; 이는 여성에게도 적용됨.
 - 기업들은 노인근로자들이 청년들보다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30세 최고소득임.
- 노인근로자 고용 연장의 의미
 - 건강에 좋음.
 - 지적 육체적 활동 증대/ 심리적 안정
 - 자존심, 생산성 증대, 가치증진
 - 직접적으로 건강 및 복지관련 사회비용 억제
 - 정부재정 건전화: 연금 지급 감소
 - 청년부담 감소
- 조기퇴직의 요인/ 노인근로를 안하는 이유
 - 자산이 많은 경우: 그러나 DC의 일반화로 이 요인은 감소하고 있음.
 - 건강상 이유: 질병 (남성과 저소득층의 경우가 많음)
 - 부양의무: 자녀, 친척, 손주돌보기 등에 따름
- 따라서 노인근로자의 퇴직은 자원의 유실임/ 노인근로자의 인정 필요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19



노인노동시장의 의미

- 노인노동시장은 존재하나?
 - 근로자의 존재는 청년근로자와의 대체성
 - 직종에 따라 Yes and no
 - 새로운 노동환경에 따른 청년들이 할 수 없는 노인들의 새로운 직종 개발 가능: 기준은 '경쟁력'
- 청년 근로기간 감소
 - 30세 직장생활 개시 50세 장기근속직장에서 은퇴함.
- 기업의 노인(ageing workforce) 개념
 - 40세 이후 소득 감소: 40 ~ 65세
 - 기업의 노인근로자에 대한 이해 없어서 사실상 40대 근로자부터 생산성 포기함.
- 연금수급 전까지 고용시장 체류 불가피
 - 노인들의 고용환경에 대한 인프라 개혁 없어서 노인고용의 질적 양적 취약함.
 - 이 결과는 청년근로자들의 사회부양 부담 증대함.
- 우리나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노인노동시장의 개념 없어 보임.
 - 일반 노동시장과 동질시함.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1



노인근로자

- 노인근로자의 욕구
 - 선택 가능한 근로와 의미 있는 노동
 - 능력과 경험의 존중
 - 형식적 대우보다는 사회적 참여
 - 동등한 기술 습득 기회
 - 직무 이동성과 진급의 동등한 기회
 - 합리적인 순응
 - 유연한 작업 스케줄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0



IV.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노동시장 정책 방향

노인노동시장 특성

- 정부실업대책: 공공형 일자리에 따른 고령자 고용 증가
- 고령자고용의 문제
 - 저임금 고용
 - 국민세금 부담 증가
 - 고령근로자들의 미스매치에 따른 생산성 감소
 - 핵심근로자 고용은 감소 중
-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한계
 - 인구감소
 - 근로자 생산성 하락
 - 잠재성장률 하락
 - 경직적 재정구조(기초연금, 공적연금 재정 적자, 무상복지 등)
-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연금 파탄으로 인한 경제부담 가중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3



2000년대 이후 노인정책의 평가

- 공공부문 고용촉진
 - 저임금 공공부문 노인 근로자 증가
- 2020년도 예산안 노인 정책
 - 기초연금 인상: 하위 40%,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13조2천억원)
 - 직접 일자리 확대 (전년도 2조1천억원에서 2조9천억원)
 - 노인일자리 13만개 확대(전년도 61만개에서 74만개로)
 - 노인일자리 기간 연장 (12개월형 비중 15%에서 50%로)
 - 노인돌봄서비스 통합제공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25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 고령자 임대주택 확대 (전년도 9천호에서 1만호로, 8000억원)
 - 돌봄 로봇 및 보조기구 개발, 치매극복 연구, ICT 기술활용 지역 사회돌봄 모델 개발 등 고령친화 R&D확대 (401억원)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5



2000년대 이후 노인정책의 평가

- 퇴직연금 도입(2005)
 - 중간정산에 따른 적립 부실화
 - 확정급여형 제도의 확정기여형화로 인한 낮은 수익률
 - 확정급여형의 수익률은 임금상승률 이상
 - 낮은 수익률: 은행 주도
 - 댁돈화 수단: 은퇴기간 중 유지율 낮음.
 - 제도개혁 방향
 - 기금화 도입
 - 퇴직연금제도 운용비용 증가
 - 기금 운용 리스크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2008) 및 치매보장(2018)
 - 고령화에 따라 요양비용의 급증: 2023년경 적자 예상
 - 요양서비스의 개인부담에서 사회부담화에 따라 다음세대로 부담전가
- 기초연금제도 도입 (2008, 2014)
 - 세금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액의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로 정부재정 악화
- 60세 정년무화(2017)
 -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조기 퇴직(정리해고) 성행
 - 임금피크제의 도입 반대로 고령자 민간 고용 감소
- 공무원연금 연금개시연령 65세 상향조정 (2015)
 - 공무원연금재정의 개선효과는 제한적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장기적 재정 악화 재발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4



유형별 고령자고용촉진 정책

- 첫째, 적극적 고용형 및 창업지원형
 -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충분한 경험이 있는 계층
 - 기업육성, 지역공동체 연계 일자리, 근로자 생산협동조합, 시니어의 기능전수 사업 등
 - 중장년 창업 지원
 - 1996년부터 2007년 동안 설립된 미국의 기업들 가운데 55-64세사이의 고령자들이 가장 기업활동 비율이 높았음. 그리고 20-34세연령이 가장 낮았음 (Dane Stangler, 2008).
 - 미국의 판매액 100만달러 이상인 하이텍 및 제조업 652개 가운데 성공적인 기술집약사업의 평균 연령은 39세, 50대이상에서 창업한 창업자들이 25세이하에서 창업한 창업자들의 2배임. (Vivet Wadhwa et al., 2008)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6



유형별 고령자고용촉진 정책

- 둘째, 현상유지형 (혹은 점진적 퇴직)
 - 재직근로자의 고용연장 및 역량강화
 - 60세 이상 정년 및 60+ 고용연장 유도
 - 고령근로자(예: 50세 이상)를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 임금피크제 도입
 - 고령자 고용 가능
 - 시간피크제 도입: 근로시간 유연화
 - 일정시간 이상 근무시 정부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 직무재교육, 직업훈련 및 전환교육 의무화를 통한 고용연장
 - 50대 이전부터 강화
 - 70세 고용이 가능하다면 집중적 직업훈련으로 10년 이상 노동시장 체류 가능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7



세대간 협력

- 청년세대와의 세대간 협력
 - 장년의 경험 노하우와 청년의 활력 연대
 - 중고령자 재교육
 - 대학시스템 활용
 - 파트타임학생제도 활성화
 - 연령차별금지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 고령자들의 임금 및 근로복지 유인 제고
 - 차별적 임금 억제, 사회보험료 면제 등
 - 기업들의 유연한 고용수요 창출
 - 고용시장 유연화, 창업 등
 - 기업의 작업환경 및 기업문화 개선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9



유형별 고령자고용촉진 정책

- 셋째, 사회봉사형
 - 연금 등 기본적 생계수단이 있는 계층이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 후 관련분야에서 사회적 봉사함.
 - 자치단체로부터 실비 보상 등
 - 사회적기업 혹은 협동조합 중심의 활동
- 넷째, 생계보완형
 - 노후생계 수단이 부족한 계층으로 사회적 일자리 등
 - 일정의 교육 이수 의무화
- 현재의 고령자고용정책은 사회복지에 기초한 셋째와 넷째에 집중됨.
 - 고령사회는 연령에 관계없는 첫째와 둘째로 전환해야 함.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28



연령별 대응

- 50세 이전
 - 금융교육 의무화
 - 직무재교육 혹은 전환교육
- 50-65세: 장년기
 - 은퇴교육
 - 이모작 준비(실행)
 - 점진적 퇴직
- 65-75세: 노년기
 - 70세 이전: 생계 보충적 고용
 - 70세 이후: 정부 노후생활지원
- 75세 이후: 후기 노년기
 - 체계적 사회서비스 의존
 - 집중적 건강관리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30



근로유인형 복지제도 조정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
 - 현행 2033년 65세에서 70세로 조정
 -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로 가입기간 연장으로 수급액 증액 가능
- 국민연금 사각지대 관리 강화
 -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자 보험료 징수 강화
- 고령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
- 퇴직연금 적용대상 확대
 - 비정규직 적용 확대
- 연금시스템 개혁
 - 국민연금(기초연금통합)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은퇴고용

한국 복지정책의 진화

- 복지 1.0: 빈곤의 해결을 위한 빈곤박멸 (poverty eradication)
- 복지 2.0: 빈곤의 함정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
- 복지 3.0: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통합/융화 (social inclusion)과 기회보장
 - 양극화 해소
 - 법률적 보호/질서 강화
 - OECD 국민신뢰도 조사: 사법신뢰도 27%(40/44), 정부신뢰도 34%(26/41)
 - 사유재산권 보호
 - 지역개발에 따른 빈곤층 도심이탈과 시외 이전으로 빈민촌 형성
 -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무한 경쟁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 지적재산의 보호 부족에 따른 기회 상실
- 복지 서비스의 공급체계 진화는 부실
 -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 관료적: 공공부문의 책임성 부재
 - 복지부문의 민간인 배제: 공공부문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 이해 당사자의 기득권 보호 등

I.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복지 정책 방향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복지 현황

- 국민연금
 - 2041년 재정적자, 2057년 기금고갈
 - 국민연금 수급액 30-40% 감소 불가피
 -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보장 수단이 아님/ 최후의 노후보장수단임..
- 건강보험
 -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 급증
 - 보장성 강화 등으로 보험료율 10%이상 예상
 - 건강보험 보장율: 61.7%(2017), 63.2% (2014)
 - 민영보험 가입자: 3396만명(국민의 65.8%, 2018.6), 3150만명 (2015)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 수: 47.3만명(전년대비 +8.5%)
 - 실업급여 지급액 최고
 -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1.3%에서 1.6%로
 - 도덕적 해이로 사증적 손실 증가
 - 고용보험은 취업을 증가 수단 아님/ 고용의 현실적 책임은 산업자원 부 소관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복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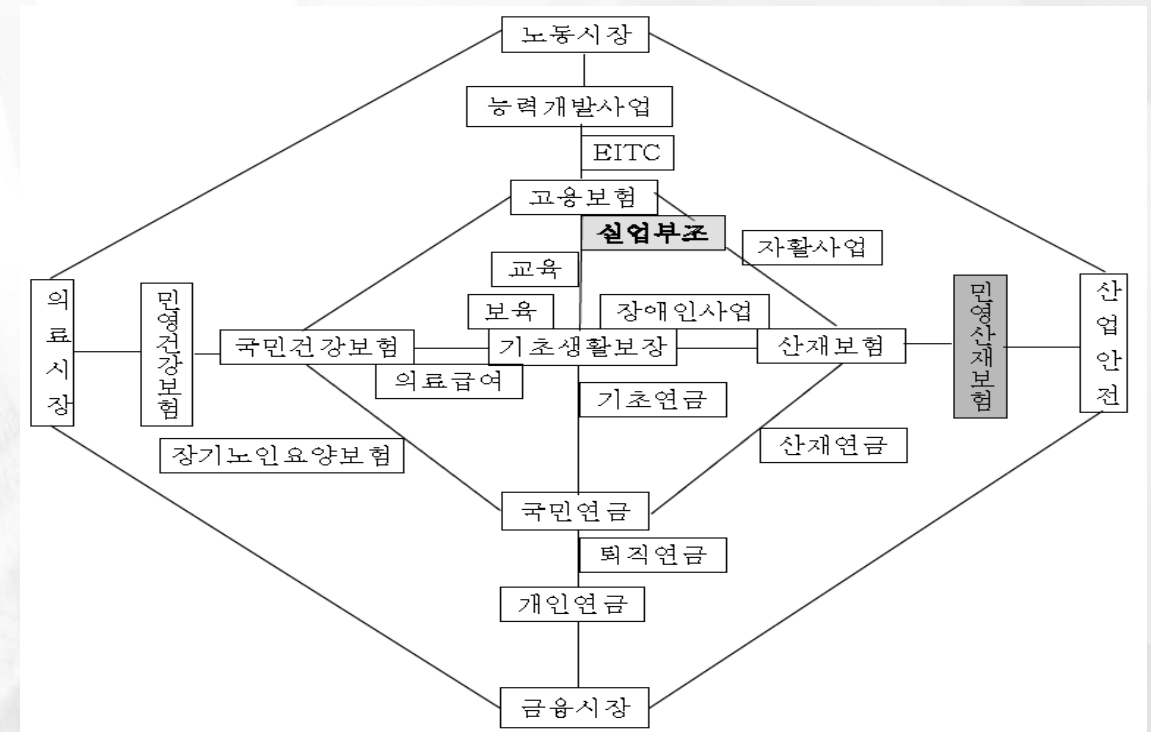
- 산재보험
 - 산재사망율: OECD 국가중 최고
 - 산재연금의 지급불능 가능성: 부과방식
- 노인장기요양보험
 - 연금이나 건강보험보다 더 심각한 미래의 폭탄
 - 2016년 적자 전환, 2022년 기금 고갈
 - 2017년 지출 = 5조4천억원
 - 2017년 수입: 보험료 수입(63.6%) + 11.5%(국고지원금) + 의료수급자 국가/자치단체 부담금(23.5%) + 기타(1.4%)
 - 요양기관의 불만족/부실화 심화
- 기초연금
 - 13.2조원(2029), 2040년 100조원 추정
- 국가중심의 사회안전망에서 Public-Private-Social Mix 사회안전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35



복지네트워크 모델(2019)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37



4차산업혁명사회의 복지정책

- '산업발전'은 복지의 기본
 - 현황
 - 19세기 산업시대 노동시장: 노동시장 효율성 83위 (WEF)
 - 지점망 금융시장: 금융시장 성숙도 87위(WEF)
 - 아날로그 의료시장
 - 불감증 안전산업: 세월호, OECD 최고의 산재사망률
 -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복지는 사회안전망의 혁신
- 4차산업기술을 활용한 '공급' 주도 복지모델로
 - 현황
 -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복지단가 상승
 - 영리추구 복지 사업가 양산
 - 4차산업기술의 글로벌화로 성장 기여 가능
- 현금복지에서 '질적 서비스'복지로
 - 현황
 - 노동집약화에 따른 비용상승
 -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 부족
 - 복지인력 부족
 - 4차산업기술로 복지산업을 노동집약산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 민간 복지산업의 육성을 통한 사회 생태의 자생력 배양
 - 공공 vs 민간 영리 vs 민간 비영리 (NPO)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36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 원칙

- 사회안전망 개혁의 원칙
 - 개인적 선택의 허용: 공공 vs 민간 vs 사회단체
 - 복지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 "만족하지 않으면 복지가 아니다/ 낭비다."
 - 제도의 투명성: 4차산업기술의 도입
 - 정치적 역동성 인식: 비정규 포함 모든 근로자 적용
 - 사회적 갈등 최소화
- 사회안전망의 운영상(경제학적) 원칙
 - 사회보험급여와 보험료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예측
 - 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경제적 왜곡간의 균형 유지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새로운기술,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개인적 행태변화 등에 따라 제고 개선
 -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득재분배 분리
 - 사회단체도 국민생산에 기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38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억제와 근로빈곤층 자립능력의 제고
 - 중산층 육성: 4차산업기술의 도구화
 - “가족 시스템”의 부활: 생산성 증대의 기본
 - 근로자도 가족: 정부 의존 탈피와 기업 역할 강화
 - 비정규직(On-demand worker)의 보호
- 복지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한 양적 질적 공급
 - 서비스 공급자의 다원화: 공공, 민간, 사회 종교단체, 자원봉사 등
 - 금융산업 및 의료산업의 활성화
-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성, 신뢰제고
 - 민영화/ 영리/ 신기업경영방식 도입
- 안정적 고령사회의 진입
 - 노인노동시장의 활성화: 재교육 강화
 - 4차산업기술은 고령자의 축복: 로봇, 자동번역, AI 등
 - 4차산업기술을 이용한 인생 3모작 사회 시스템 구축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39



4차산업혁명시대의 고령사회 성장전략

- 고령사회는 고령자들이 주류인 사회, 고령자들이 일하는 사회
 - 고령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소멸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담비 절감
- 고령사회의 투자방향
 - 고령자 생활환경 개선
 - 고령자 작업장 환경 개선
 - 고령자 건강 개선 및 well-dying
 - 호스피스시설 확대
- 노인산업 활성화
 - 정보, 전자, 바이오 산업의 재구성
- 고령사회투자가 신성장 동력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41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 정책방향

- ICT 복지시스템
 - 정부(사회복지)는 4차산업기술의 최대 수요자: 정보기술, 로봇, 생체공학 등을 성장 뿐 아니라 ‘나눔/sharing’을 위하여 활용
 - 청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하여 정보기술을 교육 훈련 활용
 - 고령자 고용을 위한 로봇시스템 도입 및 도움로봇 활용
 - 요양원 등 복지시설의 과학적 관리
 - 노화 억제를 위한 생체공학기술 보급
 - Big data의 활용을 통한 복지시스템 개혁 등
 - 복지부문에서 정부의 목표지향형 기술개발과 시스템개혁 필요
 - 사회복지의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 통일한국에 대비한 복지제도 및 복지공급 시스템의 구축
 - 4차산업기술을 이용한 북한 복지제도 구축: Jump-up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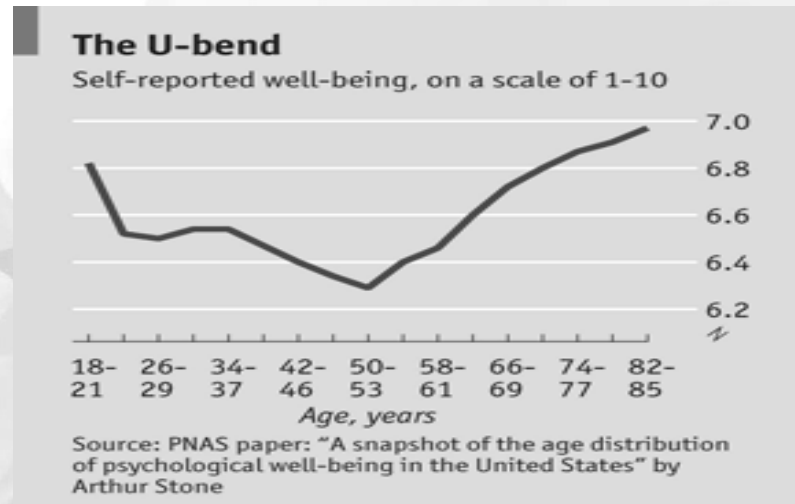


V. 결론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고령자는 불만족 세대? (No!)



출처: Economist

- Well-being(만족감)은 즐거움과 행복감(중년이 최저), 스트레스(20대 초반에 최고), 두려움(중년에 최고), 증오(지속적 감소), 슬픔(중년에 최고) 등에 따라 달라짐.

고령사회 대책

- 고령자 유형별 고용 확대
 - 정년보장 및 정년연장
 - 고령친화적 기업환경
- 노인을 위한 생활서비스의 투자: 노인생활비 억제
 - 건강관리서비스/ 요양시설 등
 - 시니어타운
-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의 강화
 - 다양한 금융기법에 대한 이해
 - 생애위험에 대한 인식제고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투자
 - 직장의 작업장 개선: 자동화 로봇화
 - 차선 노폭 확장, 도로표지판 개선
 - 이동성 개선을 위한 경사면, 에스컬레이터 설치 확대

노인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성: How to?

- 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퇴직연령 일치
 - 정년 폐지 (실질적 연령차별 금지)
- 공적연금은 비정규직근로자 적용 의무화
- 정부의 연령차별 금지 강화
 - 고령자 해고 못 시키게 하면 고령자 고용기피 가능성
- 노동시장 유연화: 인사관리 잘하는 직장은 여성 파트타임 선호 정년이 연장되면서 근로노인들의 영향력 증대
 - 고령자들도 할 수 있음.
- 고령자 성과급 인정: 근로자는 임금/직급하락 받아들이야

고령사회 대책

- 고령자 산업의 육성
 - 연금: 연금갭 확산, 조기연금가입(복리효과 극대화)
 - 건강보험: 보충형 의료수요
 - 장기요양보험: 요양기간의 연장
 - 고령자 여가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확산
 - 고령자 보조기구 산업: 신기술의 응용
 - 고령자산업의 세계화: 세계는 모두 늙게 되어있음.

노인노동시장 정책방향: Again!

- 노인노동시장의 정상화
 - 연령차별형 저임금 지양
 - 점진적 퇴직의 제도화
- 정년폐지
 - 정년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년이전 조기 감원, 명예퇴직 등 성행 중.
- 공공형 일자리 억제
 - 노인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
 - 국가재정의 낭비(비효율)
- On-Demand 노동시장의 활성화
 - 노인중심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활성화
- 제도적 노인연령 상향 조정
- 연금수급연령 70세
- 노인정책에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접근법 도입: 핀테크, 로봇 등
 - 케어 로봇 산업화 (일본)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47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차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토론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4차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

송헌재(서울시립대 경제학부)

2018년 12월 말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고령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노후 시작 시기는 평균 68.5세로 조사되었다. 거의 70세에 육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정년 나이는 60세이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 연령은 50세가 채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노후 시작시기보다 10년 빨리 정년에 도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정년에 이르기 10년 전에 퇴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고학력화와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20대 후반임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간은 약 20여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생 동안 단 20년 간 일하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거의 동일한 기간 동안 인적자본 취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면서 퇴직 이후 기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짐에 따라 학생들 입장에 서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높으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선택해야 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대학 입시 최고의 정점에 의대가 자리 잡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정립되어 버렸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상황이 최첨단 산업의 일선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커다란 부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인재들에게 다른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또한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한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인적자본이 여기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이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 고용에 대한 결정에 제약이 많으면 경기 침체기에 당면할 수 있는 인건비 부담을 염려하여 젊은이들의 신규 고용을 망설이게 된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시장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한 번 진입에 성공하면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직종을 선호하게 된다.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활력을 잃게 만들었다.

현재와 같이 노동시장의 경직적인 구조에서 한 번 정규직이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장이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법으로 정년을 두는 것밖에는 없다.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시장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노동시장에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기업이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 또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만일 기업이 고용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도 한결 쉬워지고 기업이 정년을 두고 고용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필요성도 줄어들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까지의 준비기간이 줄어들고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쌓은 인적자본이 노동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50세가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이들이

60세가 지난 이후에도 적절한 임금 수준에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은퇴의 기로에 선 장년층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를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토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시대의 노인: 고용과 복지” 토론회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전반적인 검토의견

- ☐ OECD 회원국 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담고 있는 발제문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음.
- ☐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많은 문제를 다가올 4차산업혁명시대와 연관시켜 기술하고 있어,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보임.
- ☐ 발제 내용 중에서 현재의 고령근로자가 ‘새로운 자원’이라는 지적에 적극 동의하는바임.
- ☐ 평균수명이 83세인 현재,
 - 취업연령이 30세로 매우 늦고, 퇴직연령은 50세로 매우 빠르다 보니,
 - 20여년이라는 짧은 경제활동기간을 담보로, 사망시점까지 33년의 장년·노년기를 보낸다는 패러다임은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임.
- ☐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지확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또는 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적지 않은 것이 작금에 우리가 처한 현실임.
 - 이는 1990년대 초부터 활기찬 노후(Active Ageing)을 통해 고령 근로를 장려하고 있는 OECD 주요 국가들의 정책방향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음.
- ☐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발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인근로자가 우리 경제의 마지막 자원(resource)” 라는 지적에 적극 공감하는 바임.

2. 세부 각론에 대한 검토 의견

가. 노인 노동시장과 노인복지 현황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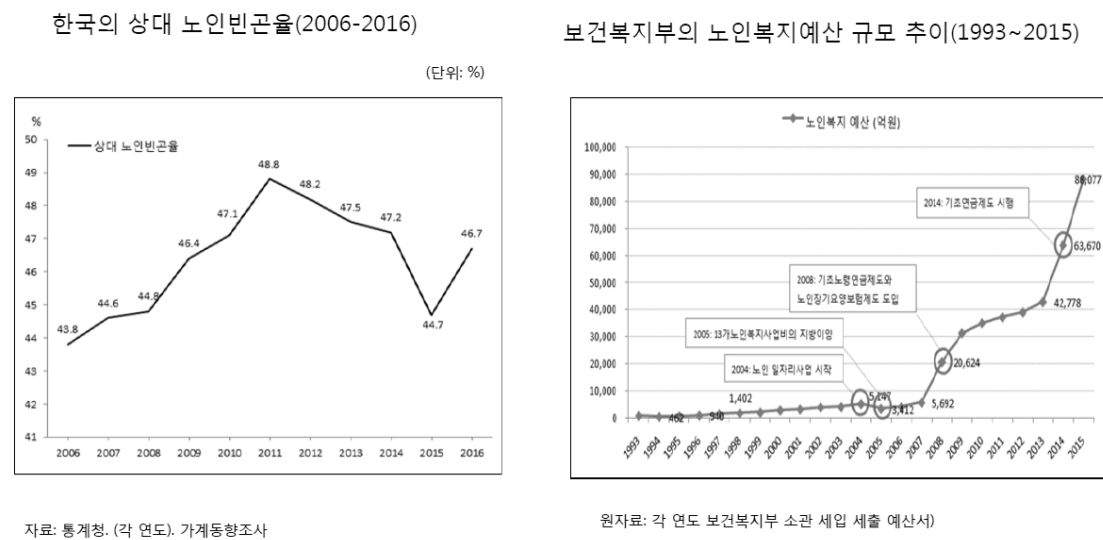
- ☐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768.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9%, 2025년 20.3%, 2060년 이후에는 4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 취업률에 큰 변화가 없음.
 - 31.3% (2018년), 30.6% (2017년)으로 2008년의 30.6%와 비교할 때, 지난 10년 동

안 거의 변화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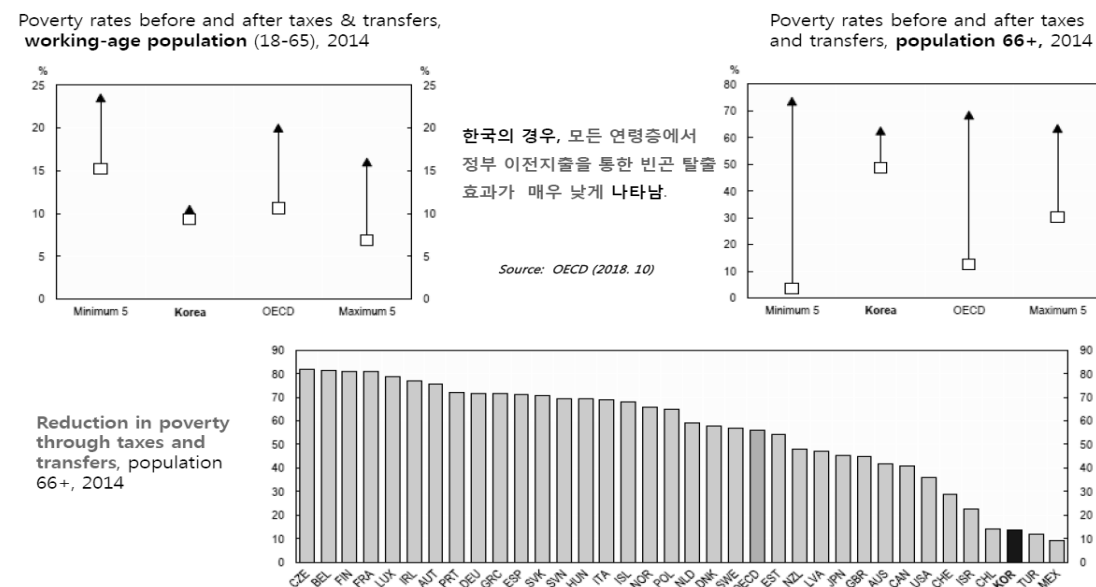
-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근속기간 역시 15년 정도에 불과하고, 중·고령층으로 갈수록 근속기간이 더욱 짧아지면서, 저임금·초저임금 근로자를 양산함.

□ (발제문에서는) 2020년도 사회복지와 보건부분 예산이 181.6조원으로 정부예산의 35.3%(146.4조원, 2017)에 달하고 있으나, 빈곤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음.

〈그림 1〉 노인 빈곤율과 복지예산 증가 추이



〈그림 2〉 OECD 회원국 대비 (복지 지출 등을 통한) 낮은 소득재분배 효과



-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이 65세 이상 노인의 70%이고,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중이 7.4%(2018년)에 이르고 있음에도,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음.

- 발제문에서는 노인 빈곤율이 OECD 상대빈곤 기준(가처분 소득의 중위 50% 미만)으로 46.5%이나, 자산을 포함하는 기준으로는 빈곤율이 29.3%로 하락하다는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 우리나라 노인들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0%에 달하다 보니, 노후자산의 연금화를 통한 노인 빈곤 문제에 대처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

- 보유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한국적인 현실을 제대로 고려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이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음.

-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적지 않아 보이는 OECD 빈곤율 정의 외에, 노인들이 보유한 자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경우 빈곤율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추정도 가능함.

- 본 토론자의 연구 결과(알카이어-포스터의 차원계수 접근)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1% 선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방법론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가처분 소득 기준이 아닌 다른 자산을 포함시킬 경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대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저소득 노인의 경우, 자산을 고려할 지라도 절대빈곤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 그래서 특히 우리 현실에서는 중요함.

- 발제문에서는 연금시스템을 “국민연금(기초연금 통합) + 퇴직연금 + 개인연금 + 은퇴고용” 과 같이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안전망 원칙으로 “사회보험으로부터 소득재분배 기능 분리”를 제안하고 있음.

- 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

- 본 토론자는 이같은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보다 구체적으로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자함.

- 현재 소득 재분배 기능이 혼재되어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성격과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선진국의 연금개혁 방향에서 추구하고 있는 연금정책과 사회정책을 명시

적으로 구분하도록 함.

- (사회정책) 구체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노인 빈곤율의 획기적인 하락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취약노인 중심으로 대상자를 축소하되, 최소한 절대빈곤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중간소득 이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저소득 자영자 등 취약계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참여유인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은 일정액의 현금과 현물급여(주택 바우처 등)를 혼합하여 지급하도록 함.

- (연금 정책)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 대책(국민연금 수익비를 경제성장률에 연동) 전제로, 완전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시키되, 적용소득 상향 조정을 통해 실질 가입자의 경우 최소한의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

○ 발제문에서 제시된 “연금 수급연령 70세로의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향후 고령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정도로, 안정적으로 고령근로가 정착된 시점 이후에는 70세로 연금수급 연령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조기퇴직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연금 수급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제안은 안정적인 연금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

*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공식적으로 연금수급 연장을 제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화되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국민연금 개편안에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2019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만 62세, 2023년에는 만 63세로 상향 조정될 예정임. 국민연금법 상 국민연금 납입연령이 59세로 묶여있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연령만 상향 조정할 경우, 소득크레바스 기간이 더욱 길어짐에 따른 노후 빈곤 문제 대두 및 이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 요구가 분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토론자에게 적합해 보이는 대안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고령 근로를 장려하면서 국민연금 수급연령(2033년 만 65세)과 국민연금 납입연령 상한 59세(2019년 현재, 그리고 2033년에도 만 59세)의 공백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음.

- 연금 수급연령 연장 대신,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추어 매년 연금액 일부를 연동시키는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 도입을 통해 연금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는 연금재정 자동안정화장치의 일환으로,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임.

나.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한, 고용 촉진방안 측면

□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으로, ‘평균수명 80세 시대’, ‘최빈도 사망연령 90세 시대’, ‘고학력의 건강 베이비붐 세대’, ‘건강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층의 Leisure Class 증가’를 들고 있음.

○ 약 72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는 인구 대비 규모와 사회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임.

- 발제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1차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의 노인세대와는 성격이 매우 다름.
- 본격적으로 국제화를 경험한 세대, 또 본격적으로 대중문화와 프로스포츠를 즐긴 세대이다 보니, 사회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음.

○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큰 이들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가 가용자원 상당부분이 이들 집단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전의 그 어느 세대보다도 복지욕구 또한 높은 집단이다 보니,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연결되어 자칫하면 복지 포퓰리즘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음.

□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임.

○ 현행의 관습을 그대로 이어갈 경우, 결국 복지욕구 분출로 인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도 매우 암울한 미래, 즉 지속 불가능한 사회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감안한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임.

○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 최우선의 정책 목표를 부여하여야 할 것 같음.

□ 바람직한 고령자고용촉진 정책

○ 향후 노동시장으로부터 쏠아져 나올 막대한 규모의 1차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는, 지속이 불가능하면서도 저임금 노인 근로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형 일자리 대신,

- 시장형 일자리가 향후 고령자 고용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 같음.
-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사회 서비스 등, 공공형 일자리 특성에 맞는 사업에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적극적 고용형 및 창업지원형’, ‘현상 유지형 또는 점진적 퇴직’, ‘사회봉사형’, ‘생계보완형’ 일자리 중에서,
 - ‘현상 유지형 또는 점진적 퇴직’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총동원하여야 할 것임.
- 절대생산인구 감소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들어 정책 당국이 제시했던, 점진적 퇴직 유형들이 실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국가적인 역량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고령자고용촉진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 및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임.
 - 사업 특성 및 사업장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다양한 점진적인 퇴직모형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들 모형이 실제 작동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적과 당근 정책을 도입해야만 할 것임.
- 우리 현실에서 고통스럽기는 하나, 작동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점진적인 퇴직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함.
- 점진적인 퇴직을 무조건 강제화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최대한 채적과 당근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점진적인 퇴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퇴직 시점을 일치시킨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한 후에, 노사가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도록 함.
 - (하나의 예로)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퇴직 시점을 일치시키기 위해, 61세(2023년 이전) 퇴직, 62세(2023~2027년) 퇴직, 63세(2028년 이후) 퇴직을 원하는 근로자의 경우, 55세 근처부터 퇴직시점까지 월급이 점차적으로 삭감되는 급여체계를 선택 가능할 수 있도록 함(노·사 단체 협약에 포함).
 -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의 계속 고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당분간은 퇴직 후 재고용도 병행 운영
 -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청년 근로자 고용을 제고 병행 노력을 통한 세대간 상생 유도
 - 이러한 급여체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퇴직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
 - 단, 점진적인 퇴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령 근로자 고용에 따른 유인을 고용주와 고령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함.
 - 적절한 대책으로는 일정비율 이상 고령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고, 4대 사회보험료도 지원하도록 함.

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측면

- 발제문에서는 4차산업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산성의 비약적인 증대, 소득과 삶 질 개선’을 언급하고 있음.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새로운 노동 환경의 도래와 전통적인 노동시장의 붕괴’, ‘비정규직의 주류화’, ‘로봇 실업’ 등을 언급하면서,
 - 특히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적응력이 현격히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복지개혁으로만 해소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전술한 내용들을 통해 이러한 발제문에 적극 동의하는 바임.
- 4차산업혁명시대의 고령사회 성장전략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하고자 함.
- 고령친화 산업을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전기 노인의 경우,
 - 전기 노인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 육성
 - 고령자 작업장 환경 개선을 통한,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제고가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친화 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
 - 전 세계 노인인구 급증에 따른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후기 노인의 경우,
 -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급증할 전 세계 후기 노인 상대의 다양한 고령친화 산업 육성
 - 고령자 생활환경 및 장기요양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최종석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토 론 문

(4차 산업혁명시대의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인의 일자리 복지정책 토론회)

최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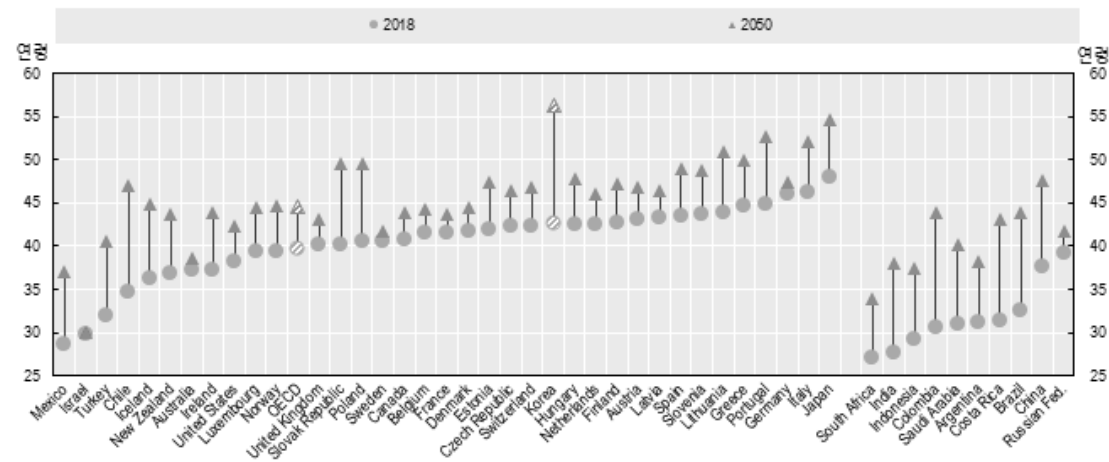
한국경제신문 노동전문위원

< 요약 >

- ☐ ‘노인’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식할 필요
- 한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OECD 최고 수준
- 노인 빈곤문제는 취약한 사회안전망 관리 시스템과 맞물려 세대간 불평등 양산
- 일자리·복지에 대해 세대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 한국의 노인세대
 - 산업화와 국부를 이룬 주역이자 기득권층이라는 상반된 인식
 - 노인 빈곤문제와 일자리 참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 청년세대에 비해 직업능력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제한
- ☐ 노인복지 및 일자리 정책 과제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신중년,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정년폐지 등
 - 신중년, 노인들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 확대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 및 일자리 정책과 연계

Ⅰ 노인 문제 vs 인구·사회 문제

- 한국 사회는 OECD 국가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2017년 중위연령은 37.8세이나 2050년이면 56.4세가 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에 불과해 고령화에 가속도
- 노인부양비율(15-64세 인구 10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5년 177명이나 2025년 경 OECD 평균까지 증가하고 2065년이면 OECD 최고 수준인 760명까지 증가할 전망
- 한국의 노인 문제는 노동시장, 사회보장, 정부재정 등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로 접근해야 할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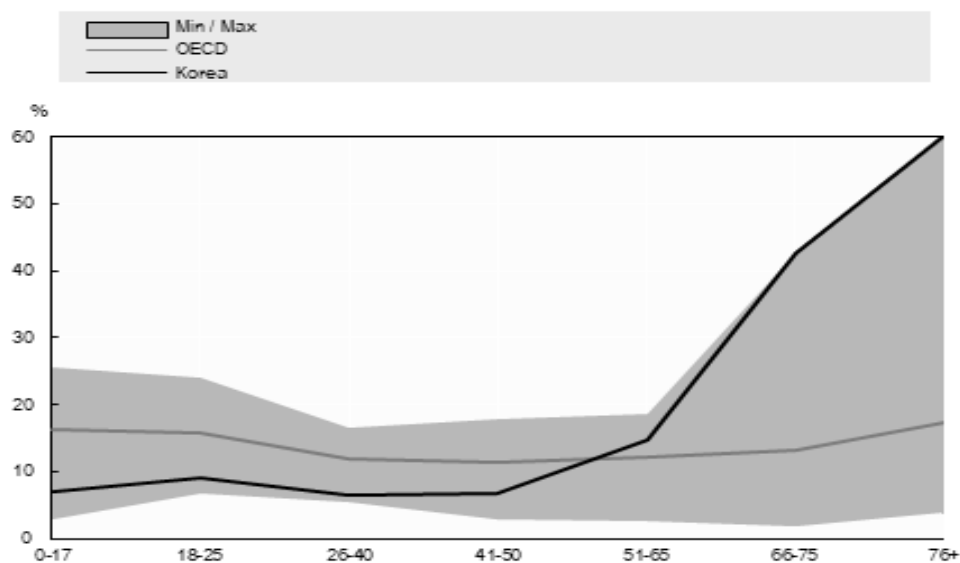


출처: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Working Better with Age (2019)

② 한국의 노인세대

-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이끌면서 선진국 대열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이룬 주역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경제개발의 수혜를 독점한 기득권층이라는 상반된 인식이 존재
- 노인 세대는 빈곤에 시달리는 비율이 높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자리 참여는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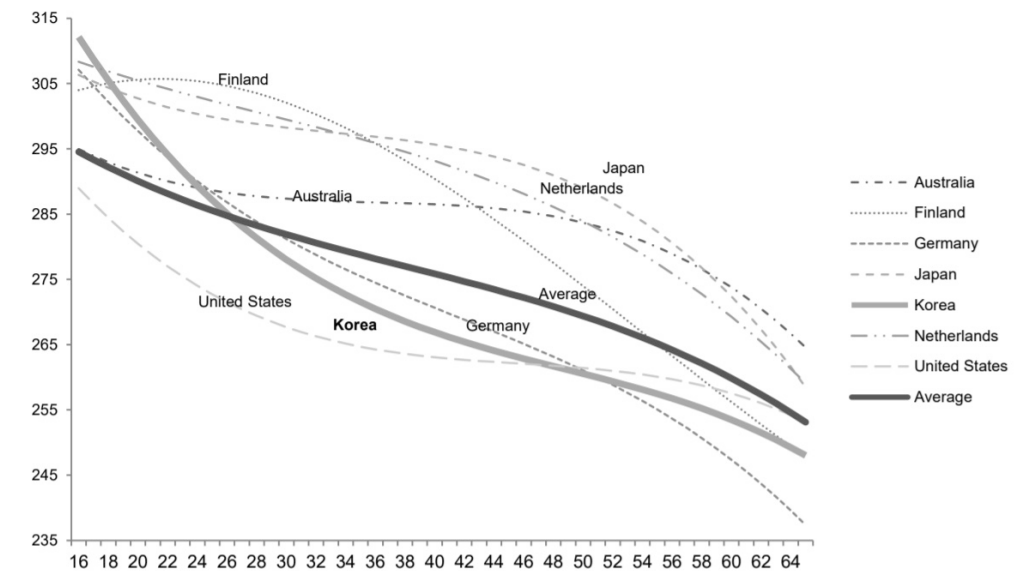
나이별 빈곤율, 2014



출처: OECD, (2018) "Working Better with Age: Korea,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 한국의 노인들은 청년세대에 비해 직업능력은 부족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한돼 있음

〈국제성인역량조사 연령대별 문해력(2012)〉



출처: OECD (2015), "OECD Skills Strategy Diagnostic Report Korea", OECD Publishing

③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국가·사회적 과제

-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신중년, 노인, 여성, 청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신중년, 노인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
 - 노동개혁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의 수를 늘릴 필요
 - 정년제 폐지 등과 같이 노인들의 재취업 등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신중년 및 노인들의 재교육 및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확대되는 디지털 격차를 축소할 필요
 - 아울러 직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도 노인들의 수요에 맞추어 개편
-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화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고 및 노인들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국가적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